

# 장수시대의 도래와 도시퇴직자의 농촌정착 가능성

김동일/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1. 100세 장수시대의 도래

“지난 6일 1백 4세 생일을 맞이한 쑹메이징(전 대만 총통의 부인)은 뉴욕 맨허튼에 살면서 산책과 서예를 즐기고 있다. 1897년 태어났으니 3세기를 거쳐 살고 있는 셈이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모후도 지난해(2000년) 8월 1백세를 맞이했다. 엉덩이 관절에 인공관절을 이식하는 수술을 두 차례나 받고도 거뜰히 걸어다닌다”(중앙일보, 2001년 3월 7일).

“할머니 나이 17세, 할아버지 22세에 결혼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결혼 80주년을 앞두고”있는 제주도 나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 사는 송을생 할머니는 만 96세, 그리고 그의 남편 이춘관 할아버지는 다섯살 위인 1백 1세인데 “아직도 기력이 정정해 가게에 들러 담배를 사서 피우곤 한다”(중앙일보, 2001년 9월 27일).

위의 글은 어느 일간 신문에 보도된 기사이다. 최근에 와서 1백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추

세를 보도하면서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왔음을 위의 신문 기사는 예고하고 있다. 100년 전만해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100세를 넘기는 사람은 희귀한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선진국의 경우, 10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00세 인구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61,000명을 넘어섰다. 1940년 불과 3,700명이었던 1백세 인구가 40년이 조금 지나서 1982년에는 32,000명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는 거의 두배가 되는 61,000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Rowe & Kahn, 1998).



일본의 경우도 60년대 150명에서 2000년 15,000명으로 40년 사이에 100배 가량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도 '80년 224명에서 '95년 490명, '98년 1,200명, 그리고 2,000년에 2,200명으로 급증했다. 전반적으로 인구 10만명당 1백세 인구가 4.7명의 수준이다. 이것은 일본의 10만명당 7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은 1960년에서 2000년까지 40년 사이에 1백세 인구가 100배 가량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198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20년 사이에 그 인구가 10배 가량 증가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1백세 인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일본의 그것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의 과학자들 가운데 앞으로의 의술과 생명 공학의 발달이 인간 수명의 연장과 관련해서 혁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 말하자면 선진국들의 경우 새로운 생명 공학의 혁명적인 발달을 통해 오늘날 75세에서 80세 사이에 있는 평균 기대 수명을 20~30년 정도 더 늘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이다. 이들 가운데 어떤 노화학자들은 사고나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 나이는 흥미롭게도 1997년 8월에 사망한 프랑스의 진 칼맹

(Jeanne Calment)여사의 나이와 거의 일치하는데, 120년이라는 숫자는 모든 동물들의 수명들과 비교해서 산출된 것이다. 거의 모든 동물의 종들에게 공통된 수명은 출생 후 성장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6배 정도임이 밝혀지고 있는데, 인간의 경우 완전한 성장까지의 기간을 18년에서 20년으로 잡으면 인간의 수명은 그것의 6배인 108세 또는 120세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처럼 장수하게 하는 생명 공학의 혁명은 빠르면 향후 5년 이내 그리고 늦어도 20년 안에 올 것으로 보며 또 많은 과학자들은 앞으로 40~50년 내에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130세 또는 그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 와서는 과학자들 가운데 인간에게 고정된 수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놀라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인간 수명의 연장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그러나 이 같은 극적인 인간 수명의 연장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현재의 노인 인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야기하는 노인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준비는 어떠한가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21세기 인구의 고령화에 이에 따른 노인 문

제의 심각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19세기 초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어 온 산업화와 과학, 의학의 발달 그리고 보건 위생의 개선과 보다 나은 영양 섭취 등등에 힘입은 인간 수명의 연장은 출산력의 저하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를 빠른 속도로 초래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보다 앞선 산업 사회에서 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어 온 영국의 경우, 1990년에 이미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 수준에 달했으며 2030년이 되면 이 비율이 2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1990년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대략 19% 수준이나 이것이 2030년에는 29%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0년 현재 약 18%에 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30년에는 거의 일본 인구의 3분의 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오늘날 5명중의 1명이 60세 이상이고 2030년에는 그 수가 전체 인구의 35%에 달할 것이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지금의 21%에서 2030년에는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진 산업 사회에서의 이 같은 높은 비율의 노인 인구 증가는 오늘날에 와서 이미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 부담의

문제를 낳고 있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는 21세기에 들어선 후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한 노인 복지 체제로는 노인들의 부양을 필경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현재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역사는 1백년을 훨씬 넘는다. 이러한 연금 제도는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정년 퇴직해서 사는 노인들의 수가 적고 또 이들이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할 때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65세를 정년 연령으로 정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했다. 1880년대 초에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독일 정부의 피고용인을 위해 연금 제도를 수립할 때만 해도 65세 이상 생존하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주지하다시피 그 당시 65세 이상 사는 사람은 20명 중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설령 65세를 넘긴다 해도 이들이 그렇게 오래 장수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자세히 지적한대로 오늘날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1백년 전의 연금 제도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다. 그러기에 미국을 위시한 선진 산업사회의 연금 제도는 벌써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예컨대 이태리 정부는 그 동안의 불안정했던 연금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더 이상 정년 퇴직자들을 뒷받침하기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하나로 알려진 일본의 경우만 해도 요즘에는 날로 급증하는 장수 노인 인구의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차 있다.

애당초 길을 잘못 들어선 러시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부지기수이고 현재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도 그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일상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에 힘겨워하고 있다. 러시아의 도시에서는 배고픈 노인들이 자신들의 수공예품이나 헌 가구, 심지어는 식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옷까지 길거리에서 파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다른 선진 산업 국가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많은 선진국의 연금 제도는 오늘날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금 살펴본 선진국에서의 노인 문제와 복지 문제에 관한 전망과 추세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실로 심각한 것이다. 비록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또 국민 연금 제도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향후 20~30년 후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지 불확실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선진 산업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국민 소득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낮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재정적인 측면이나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미약하고 후진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20~30년 후 동안은 선진국이 겪게 될 노인복지체계의 위기를 겪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30년이 지나 그 후부터는 이제 겨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국민연금 제도조차도 근본적으로 휘청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실제로 벌써부터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서 사학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삐걱거리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양육**

(다음호에 계속)